

8 기획-예비역 학생 학습권 침해



학생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예비군 학습권’ 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 예고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은 학생 예비군에 편성돼 예비군훈련을 받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하면 다른 일정은 소화하기 어렵다.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수업에 결석하고, 이는 성적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쳐 학생 예비군은 학습권에 있어 불공정한 처우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신문은 예비군 학습권 피해 실태와 함께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점검해 봤다.

출석 인정되지만 실질적 수업 내용 전달받기 어려워

지난 학기 양 캠퍼스(양캠프)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예비군훈련이 진행됐다.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서울캠퍼스(서울캠프) 재학생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국제캠퍼스(국제캠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예비군훈련이 이뤄졌다. 훈련과 함께 양캠프에서는 예비군 학업 침해 사례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캠프에서는 3월 31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가 구글폼을 통해 피해 사례를 신고받았다. 국제캠프에서는 국제캠프 예비군연대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훈련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한 강의를 별도 자료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학자추의 조사에 따르면 수업권 침해 사례는 총 2건이었다. 2건 모두 ‘수업자료 미제공’이었다. 일부 교강사의 반대로 강의 녹화가 이뤄지지 않고 수업자료도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학자추는 수업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교강사들의 수업권 보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아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예비군을 위한 강의 녹화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표하거나 해당 예비군훈련 일자의 수업자료를 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학습권 보장 핵심은 ‘온전한 수업 내용’ 보장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훈련이 작년부터 재개되면서 대두됐다. 작년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에도 한국외대에서 한 학생이 예비군훈련으로 결석 처리돼 성적에 불이익이 가해져 장학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출결 관련 피해를 본 사례는 없었다. 국제캠프 예비군연대

“훈련으로 출석은 인정되지만, 수업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는 이상 학습권이 적절히 보장될 리 없다.

의 설문조사에서는 총 7명의 학생이 훈련으로 인해 결석 처리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6명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설문에 잘못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군연대는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6명에 대해 “사실 확인 후 해당 학생에게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전원 출석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캠프를 대상으로 한 학자추의 조사에서도 출결로 인한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출석이 인정된다 해도 훈련으로 수업을 놓쳐 겪는 피해는 상쇄되지 않는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습권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훈련으로 출석은 인정되지만, 수업 내용을



서울캠 예비군연대본부가 위치한 네오르네상스관

(사진=대학주보 DB)

전달받지 못하는 이상 학습권이 적절히 보장될 리 없다. 예비군 학습권 논의의 중심이 출석 인정을 넘어 수업 내용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학습권 보장
학생회 차원으로는 역부족**

총학생회(총학)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생 예비군을 위한 수업자료 제공 사업을 통해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캠 총학은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해당 강의 녹화·녹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강의 자료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업자료 제공 사업은 교강사에 수차례 협조 요청 과정을 거쳐 해당 수업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선 교강사의 동의가 필수기 때문이다. 경영대학 학생회의 경우 강의 녹화를 위해 교강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연락이 없으면 이후 업무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이어 강의 녹화에 동의한 교강사에게는 사전에 리마인드 메일을 발송했고, 수업 당일 녹화를 진행했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예비군 학생들로부터 총 32개 강의의 녹화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이 중 20개의 강의에서만 녹화 영상이 제공됐다. 녹화 영상이 제공되지 않은 나머지 12개 강의 중 일부는 비대면 강의 전환, 요약본 제공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렇지만 일부 수업은 요약본조차도 제공하지 않아 수업 내용이 훈련 참석 학생에게 아예 전달되지 못하기도 했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녹화를 거

부하거나 답장이 없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녹화 진행 절차에 대해 학우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며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의 수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의 제도가 부재해 수업 자료의 제공 여부는 교강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강의의 저작권은 교강사에게 귀속돼 교강사는 수업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 교강사가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학생회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강의 녹화 사업을 진행해도 교강사가 이를 거부하면 마땅한 수가 없는 셈이다. 피해는 학생의 몫이다. 경영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영상 녹화와

관련한 기준과 공문을 보내는 등 학교 본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제우분개 상세히 설명드리며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학교 차원 조치와
법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뒷받침돼야**

현재는 총학과 예비군연대본부가 예비군 학습권 피해 사례와 제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학교에 전달하고 있다. 학자추는 “이번 교육권 침해 피해 사례를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하고, 해당하는 강의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제캠프 예비군연대본부는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하여 단 한 명의 피해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전 다양한 수단(대학교 홈페이지, 각 대학 및 대학원 협조문

발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경희특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피해 사례 발생 시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실 확인 및 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신문은 예비군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사지원팀에 질의했다. 학사지원팀은 내부 회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후 답변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한 국외대 재학생이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출결에 불이익을 받아 논란이 되자 마련한 조치다. 당정은 현행 예비군법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해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고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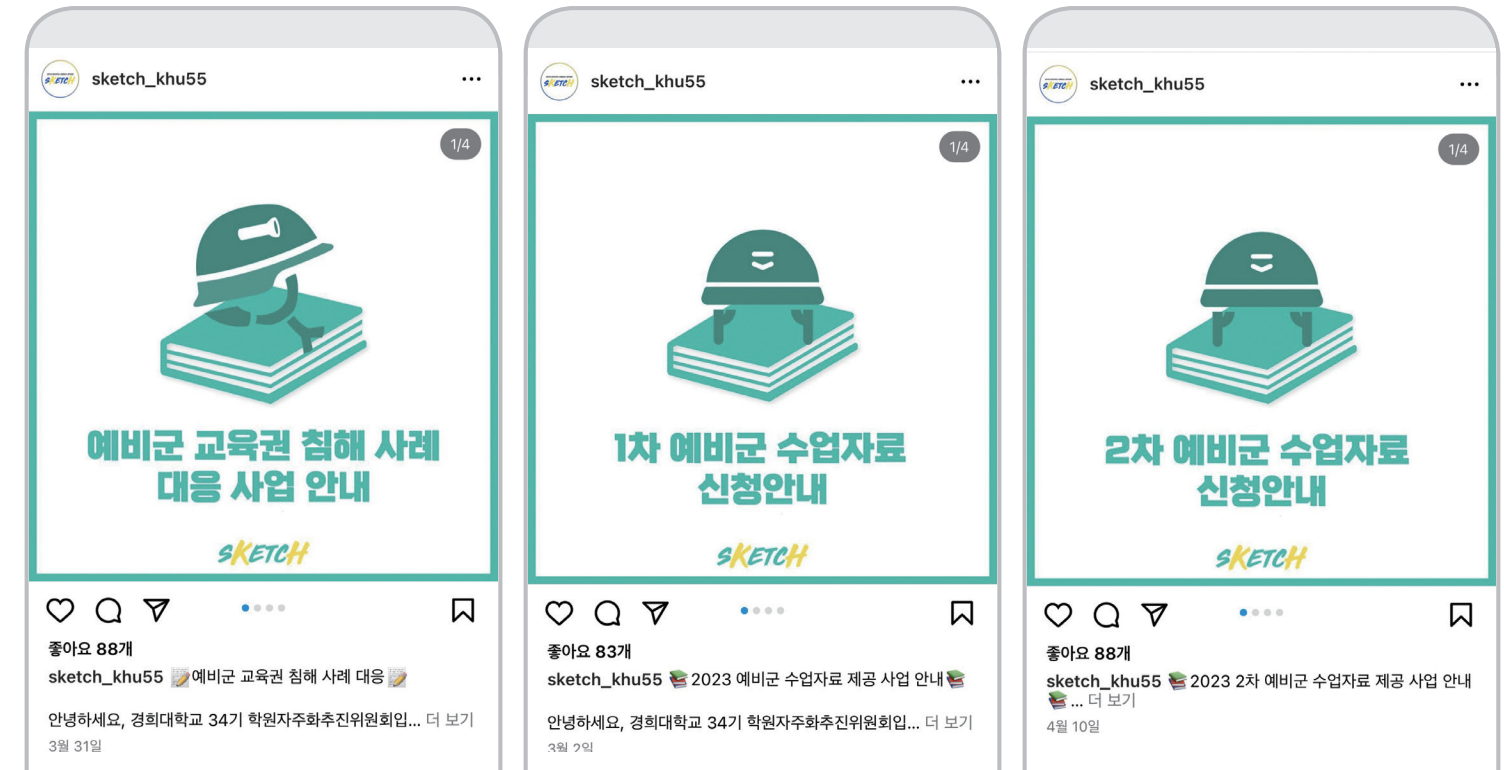
야당에서도 예비군 학습권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예비군 처우 실태와 관련해 “남들이 안 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서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2월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직장 또는 학교에서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계류 중이다.

교육 당국의 지침이나 정책 변화 움직임이 생기면 이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예비군 출석 불인정 사례로 예비군의 학습권 문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논의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예비군훈련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제는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차례다.



국제캠 예비군연대본부가 위치한 학생회관

(사진=대학주보 DB)



서울캠 총학의 예비군 학습권 보장 관련 사업안내 카드뉴스

(사진=서울캠 총학 인스타그램 갈무리)